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2. 27.(수) 11:00, (지면) 2023. 12. 28.(목) 조간 배포 2023. 12. 27.(수) 06:00
[2023년 해양수산부 정책돋보기]

낡고 불필요한 규제, 과감하게 덜어냈다

-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등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 발표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27일(수) '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.

해양수산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. 또한 규제개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상·하반기에 대표사례를 선정한다.

해운분야 대표성과로는 '자율운항선박법* 제정'이 선정되었다. 기존에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,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시 여러 차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 이달 8일 선박검사·승무정원 등에 관한 규제 특례조항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,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약 99조 원 규모에 달하는 관련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첨단 자율운항장비가 탑재되어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

수산분야에서는 '수산물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확대'를 대표성과로 꼽았다. 그간 복잡한 참여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·가공·판매업자의 참여율이 낮았으나, 올해부터는 입력대상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였다. 또한 가공기업, 유통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, 제도를 효율화하여 이력제도로 관리되는 물량을 4배**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.

** '22년 생산량 대비 이력관리물량 1.76% → '23.10월 7.11%로 약 4배 증가

이 외에도 메탄올 운송선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송업 겸업제한 완화,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(15만㎡) 제한 완화, 어선검사제도 및 어업관리선 규모 제한 합리화, 수산가공품 지리적 표시제 개선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기울여 듣고,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	책임자	과 장	홍근형 (044-200-5160)
	규제개혁법무담당관	담당자	서기관	김수정 (044-200-5166)

참 고

'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세부내용

1

자율운항선박 현장 도입을 위한 법 제정

메시지	첨단선박 현장 도입기반 마련 및 국내기업 해외시장 선점 기대
개선 전	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 기준이 없어,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시 승인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불편 발생
개선 후	자율운항선박법에 선박검사·선박시설·승무정원 등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, 원활한 실증 및 운항 지원 ※ 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」 국회 본회의 통과('23.12월),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('25.1월 예정)
담당자	스마트해운물류팀 범상섭 사무관(044-200-6202)

2

연료공급선박 검업 제한 완화

메시지	친환경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선점 및 국내항만 경쟁력 제고
개선 전	친환경연료(메탄올)을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지만, 전용 연료 공급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주와 조선사들이 연료를 공급받는 데 불편
개선 후	전용 연료 공급선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화학물질 운반선으로도 메탄올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검업 허용 ※ 「내항해운고시」 개정('23.10월)
담당자	연안해운과 윤현석 사무관(044-200-5735)

3

항만입주기업 임대면적 제한 완화

메시지	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면적 제한(15만㎡) 완화로 기업의 투자 유인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
개선 전	15만㎡ 이상의 항만배후단지를 임대하려는 기업의 경우 정성적 요건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투자 불확실성 존재 ※ 정성적 요건 :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가 큰 기업
개선 후	승인요건을 정량화하여 기업이 해당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제한면적 이상 임대 허용 ※ 정량적 기준 : 단위면적당 물동량, 연간 매출액, 고용 규모 중 2가지 이상이 해당 항만 내 상위 20% 수준인 경우 승인 불필요
담당자	항만물류기획과 박지훈 사무관(044-200-5755)

4

수산물 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확대

메시지	참여 부담 경감으로 이력제 참여율 대폭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
개선 전	복잡한 참여 절차,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생산·가공·판매업자 참여 유인이 부족하여 이력 관리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.76%('22년)에 불과
개선 후	입력 정보 최소화·정보 입력 단계 단축으로 참여자 부담을 경감하고, 민간 주도로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율 4배 이상 증가('23.10월 기준 참여율 7.11%)
담당자	유통정책과 이지연 사무관(044-200-5446)

5

어선검사제도 개선으로 시간·비용 절감

메시지	10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비용 93%(10년간 최대 2,047억원) 절감 및 검사시간 86% 단축 효과
개선 전	5톤 이상 어선은 매 10년마다 개방검사를 받아야 함 (검사비용 최대 2,000만원·검사기간 7일 소요)
개선 후	기존 5톤 미만에만 적용되던 비개방정밀검사를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 편의 제고 (검사비용 약 140만원·검사기간 1일 이내(약 4시간) 소요) ※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 개정('23.12월)
담당자	어선안전정책과 임영민 주무관(044-200-5553)

6

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제한 완화

메시지	관리선 규모제한 합리화로 조업안전·효율성 향상, 어선임차비용 절감(연간 약 222억원)
개선 전	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선복량이 총톤수 8톤 미만으로 제한되어 어구 설치·철거 시 안전사고 우려, 어선 임차에 따른 어업인 부담 가중
개선 후	총톤수 25톤의 범위 내에서 관리선 규모를 지자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규모 제한 합리화 ※ 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'23.7월 시행)
담당자	어업정책과 윤재웅 사무관(044-200-5520)

메시지	우수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제품 개발 및 홍보 지원
개선 전	<p>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만 제품명에 지리적표시 가능</p> <p>※ 생산지 경계가 모호한 어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농산물과 동일하게 제도 운영</p>
개선 후	<p>어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·가공 지역의 지리적 특성만을 갖춘 경우에도 지리적표시 허용</p> <p>※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8호 “지리적표시” 정의규정 개정('23.8월)</p>
담당자	수출가공진흥과 윤병문 사무관(044-200-6297)